

현안과 과제

■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과 시사점
- 기업의 활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비 회복의 핵심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최근 독일 경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15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약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자신뢰지수도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면서 향후에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독일 소비 활성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

최근 독일의 소비 회복 배경은 첫째, 고용 개혁을 통한 임금근로자 확대로 주력 소비 계층이 늘어났다. 독일은 고용개혁('03~'05년 4단계로 진행) 이후 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최근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05년 이후 약 355만명 증가하여 소비가능 인구가 늘어났다. 둘째, 기업 실적 호조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독일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로존 위기에다 재차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가 지속됐다. 이는 생산성 증가를 동반하였으며, 「생산성=임금」의 경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비 여력 확충으로 이어졌다. 셋째, 저물가·저금리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14년 이후 0%대로 낮아졌다. 또한 1년 미만 예금금리도 '13년 이후 0%대로 하락했다. 이에 가계 저축률은 '10년 9.9%에서 '14년은 9.4%로 낮아진 반면,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구매의욕지수는 '14년 1월 50에서 '15년 3월 63.0으로 8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넷째, 부동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로 소비 여력이 확충되었다.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는 '10년 100에서 '14년 3/4분기에 113.8로 상승하였고 주택 수요 확대로 주택건축, 리노베이션 등 주거 개조 관련 소비가 '14년 393억 유로로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했다. 또한, 독일 주식시장도 '1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 여력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소비 위축 요인인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10년 1/4분기 63.7%에서 '14년 3/4분기 54.0%로 낮아졌다. 한편, 독일의 가계총부채/소득 비율은 '10년 87.7%에서 '13년 83.3%로 하락했고 금융순자산도 같은 기간 174.0%에서 183.4%로 높아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 시사점

독일의 소비 회복의 배경을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 개선 및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독일 경제의 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반면¹⁾ 이를 대신하여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함

- 최근 독일 경제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그 대신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독일의 수요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14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4%p로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함
- 반면, 경제 성장 중 순수출의 기여도는 '12년 1/4분기에는 0.8%p에 달하였으나 '14년 4/4분기 -0.3%p, '15년 1/4분기 -0.2%p로 하락함

- 독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년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승폭이 컸고 가계소비 증가율도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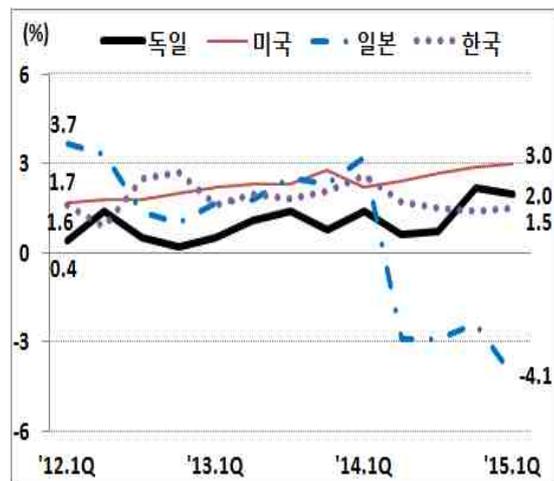
- 독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년 1/4분기 0.4%로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서도 낮았지만 '14년 이후에는 일본, 한국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15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함
- 특히, 독일 가계소비 증가율은 '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는데 이는 '11년 2/4분기 이후 최고치임

< 독일 경제성장(전기대비) 중 순수출, 민간소비 기여도 >



자료 : 독일 통계청, 국민계정.

<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자료 : OECD.

1) 독일의 경제성장 중 순수출 기여도는 '00~'10년 평균 0.6%p 였지만 '11~'14년은 평균 0.5%p로 줄어든 반면, 민간소비는 0.4%p에서 0.7%p로 높아짐.

○ 독일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유로존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소비 회복세의 지속이 예상됨

- 독일 소매판매는 '14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년 1월 전년동월대비 1.1%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4년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4%, '15년 5월도 4.2%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유로존의 평균 소매판매 증가율도 '14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독일보다는 낮음
-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도 '13년 이후 장기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15년 들어서 다시 양(陽)의 값을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개선중임
 -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3년 -7.6p로 장기평균인 -6.5p('00년 1월 ~'15년 5월 평균)보다 낮았지만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였고 '15년 5월 기준 3.0p로 개선됨
 - 한편, 유로존 평균 소비자 신뢰지수도 '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15년 5월 -5.5p로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음

○ 최근 국내 민간소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바 독일의 소비 진작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독일과 유로존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통계청).
 주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독일과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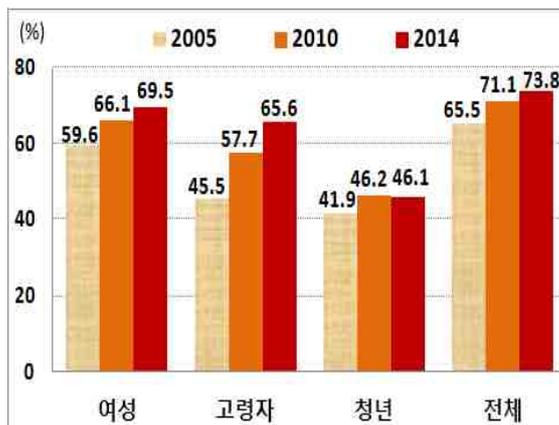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유럽위원회).

2.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

○ (임금근로자 증가로 주력 소비 계층 확대) 고용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중심의 고용 개혁으로 임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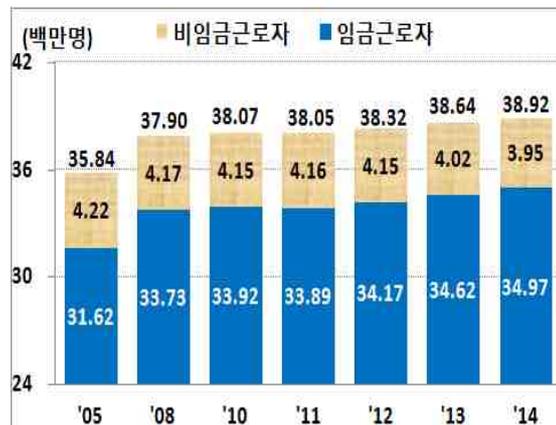
- 독일은 고용개혁을 통해 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까지도 늘리면서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독일은 '03~'05년까지 4차례에 걸친 고용개혁(하르츠 개혁)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 조건 및 해고보호법의 적용범위 완화, 미니·미디잡 등 고용 유형 다변화, 직업 훈련 과정 개선 등이 이루어짐
 - 독일 고용률은 '05년 65.5%에서 '08년 70%를 넘어섰고 '15년 1/4분기 74.1%로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05년 11.2%에서 '15년 1/4분기 4.8%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함
 - 부문별로는 여성 고용률이 '05년 59.6%에서 '14년 69.5%, 고령자 고용률도 동기간 45.5%에서 65.6%로 20.1%p 증가하며 취약계층 일자리가 증가함
- 특히, 일자리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줄어들어 소비가능 인구가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05년 3,162만명에서 '14년 3,497만명으로 약 335만명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동기간 422만명에서 395만명으로 약 27만명 축소됨
 -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05년 35.2만명에서 '14년 12.2만명으로 1/3수준으로 감소함

< 독일의 부문별 고용률 변화 >



자료 : Eurostat(유럽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독일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통계청).
 주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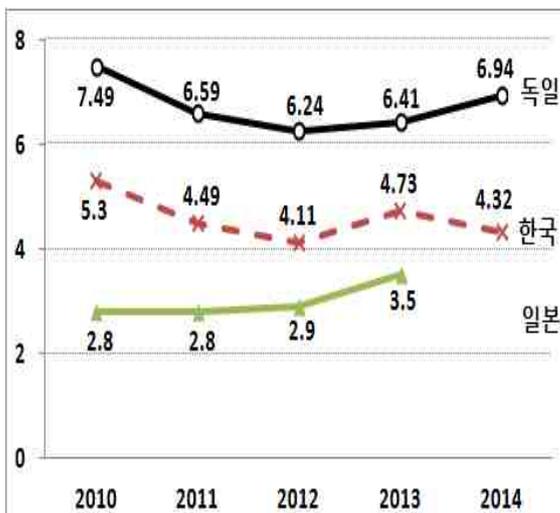
○ (기업 실적 호조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 기업의 실적 호조가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고 소비 여력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됨

- 독일은 유로존 위기 발발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됨
 - 독일 기업(비금융기관)의 매출액 규모는 유로존 위기로 '08년 1.30조 유로에서 '09년 1.18조 유로로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14년 1.57조 유로의 최고 실적을 달성함
 - 독일 기업(전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9년 4.9%에 머물렀으나 이후 '10~'14년 평균 6.7%로 상승함. 이는 한국, 일본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임

- 기업 실적 호조(생산성 증가)로 '10년 이후 독일 근로자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확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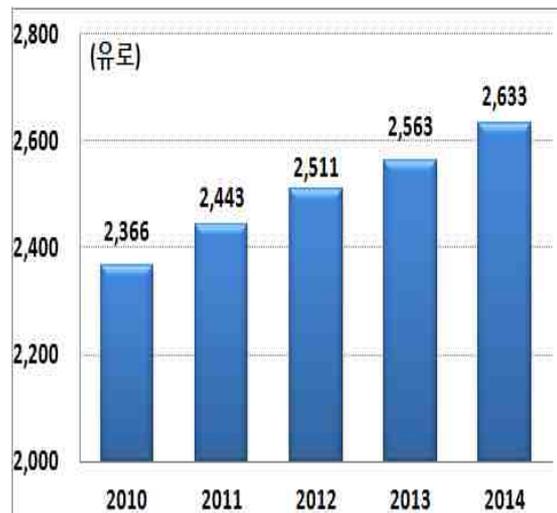
- 기업 실적 호조는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생산성=임금』의 경로를 통해 독일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고 소비 여력이 확충됨
- 독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년 2,366유로에서 '14년 2,633유로로 연평균 2.7% 증가했고 '15년 1/4분기에도 2,542유로로 전년동기간의 2,481유로 대비 2.5% 증가함

< 독일, 한국, 일본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자료 : 독일 연방은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외.
주 : 전산업 기준임.

< 독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 >



자료 : 독일 통계청.
주 : 세후(Netto) 임금 기준임.

○ (저물가·저금리로 실질 구매력 상승) 에너지 가격 급락에 따른 저물가와 저금리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소비 성향이 상승함

-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14년 이후 0%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ECB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라 예금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12년 1월에는 2.3%로 ECB 목표인 2%보다 높았지만 '14년 이후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대로 급락하면서 0%대로 낮게 유지됨
- 또한, ECB의 제로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1년 미만 예금 실효금리 (effective interest rate)도 '10년 1월 1.1%에서 '15년 4월 0.3%로 낮아짐

- 저물가·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 성향도 8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 독일의 가계 저축률은 '10년 9.9%에서 '13년 9.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14년에도 9.4%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0년 대비 낮은 수준임
- 반면, 독일 시장조사기관인 Gfk(Gesellschaft für Konsumforschung)²⁾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구매 의욕(Willingness to buy)지수가 '15년 3월 63.0로 8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12년 이후 지속 상승함

< 독일의 부문별 물가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 통계청).

< 독일 가계의 소비성향(구매의욕 지수)과 저축률 추이 >



자료 : Gfk, 독일 통계청.

주 : 구매의욕지수는 월평균이며, '15년은 1~6월 평균임.

2) Gfk는 1934년에 설립된 독일 최대 시장조사기관이며 Nielsen, Kantar 등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임.

○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 여력 확대) 주택, 주식 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기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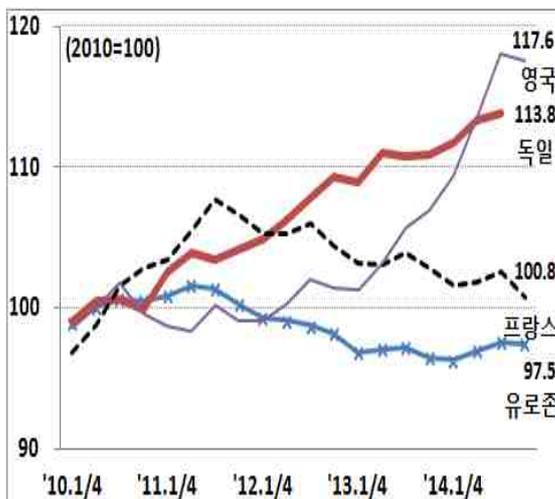
- 독일은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주거 관련 소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함

-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는 '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4년 3/4분기 기준 113.8(2010=100)를 기록한 반면, 유로존 및 프랑스 등의 주택가격 지수와 '1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중임
- 특히, 독일은 주거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출이 '14년 393억 유로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주거 개조, 가구 및 주방 등과 관련된 대출도 다른 부분을 큰 폭으로 상회함³⁾

-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1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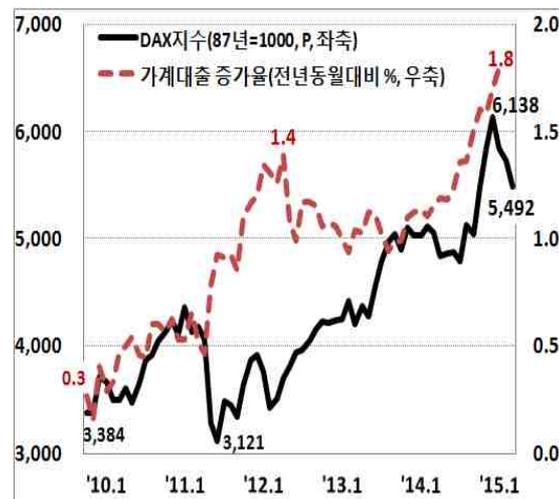
- 독일 DAX지수는 '11년 9월말 3,121(87년=1000)P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5년 3월말 6,138P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6월말 현재 5,492P를 기록함
- 한편, 주택가격 상승세로 가계 대출은 '14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대출 잔액도 '12년 1월대비 '15년 4월 604억 유로, 4.2% 증가함

< 유로존 및 주요국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통계청).

< 독일 주식시장 지수와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독일 연방은행, 유럽중앙은행.

3) The Wallstreet Journal, 'German Economy Gets Boost From Spending On Home Improvements', '15년3월 10일.

○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 독일은 GDP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꾸준히 축소되고 부채상환여력은 높아져 안정적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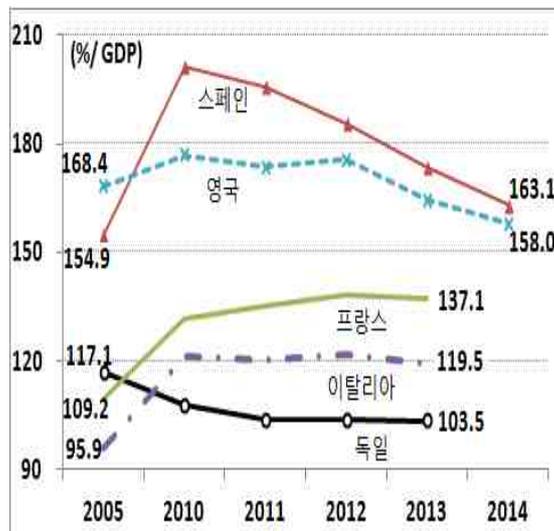
- 독일은 GDP 대비 민간부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안정적으로 관리됨

- 독일의 민간부채는 유로존 주요국 중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GDP 대비 민간부채는 '05년 117.1%에서 '13년 103.5%로 하락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함
- 특히, 독일은 '10년 이후 주택구매 등을 위한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1/4분기 63.7%에서 '14년 3/4분기 54.0%로 낮아짐

- 한편, 독일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은 개선되고 있음

- 독일 가계의 소득대비 총부채(Gross debt to income) 비율이 '10년 87.7%에서 '13년 83.3%로 하락하면서 부채상환여력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가계의 금융순자산 비율도 '10년 174.0%에서 '11년 169.0%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하여 '13년은 183.4를 기록함

< 유로존 주요국의 민간부채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 통계청).

< 독일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추이 >



자료 : Eurostat(유럽 통계청).

3. 시사점

- 최근 독일의 소비 호조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 상승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고용 확대, 저물가·저금리, 자산 효과 등으로 가계 구매력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에 가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에도 소비 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독일 소비 회복의 배경을 살펴 본 결과 국내 소비 진작의 핵심은 기업의 활력 강화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소비 회복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 강화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 개선 및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 공공 R&D 성과 도출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제조업과 IT 기술 융합 지원 확대, 공공 R&D 성과의 민간 기업 이전 활성화 등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까지 경제 영토를 꾸준히 넓혀 온 만큼 이의 활용성을 높여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함
 -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이 이전되는 통로를 확장시켜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다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 노력에 대해 세제 감면이나 정부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마찰적 실업 최소화 등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둘째,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통한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 확대가 필요함
 - 독일은 2005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꾸준히 확충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여력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일자리 확대가 단순한 시간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전일제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임
- 산업별 고용 창출력 분석을 통해 고용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고용 인센티브도 확대됨
 - 한국의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14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 또한 건설업과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도 부진한 만큼 산업별로 특화된 고용 정책이 요구됨

셋째,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소득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가계의 소비 심리도 개선해야 한다.

- 우선,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용 및 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도 함께 높여나가야 함
- 중소득층을 위해서는 소득향상 대책과 기존 대출의 저금리·장기로 전환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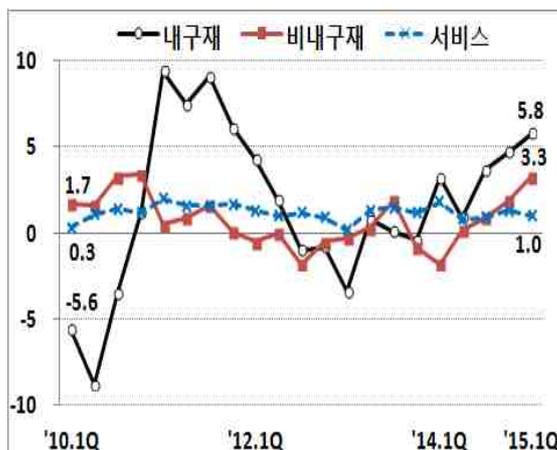
【별첨】 독일 가계의 소비 항목별 추이

○ 독일 가계 소비는 내구재, 기호재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저물가 등에 따른 가계의 지출 여유분이 내구재 소비 확대로 연결됨
 - 독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0년 19,085유로에서 '14년 20,905유로로 연평균 2.3%상승했고 '15년 1/4분기에도 5,313유로로 전년동기기간의 5,180유로 대비 2.6% 상승하는 등 소비 여력이 확대됨
 - 특히, 독일 가계 소비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14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8%로 비내구재 3.3%, 서비스 1.0%에 비해 높았음

- 소비목적별로는 가구/가사용품, 의류, 교통/통신, 여가 지출 확대폭이 높음
 - 독일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10년 100 대비 '14년 104.8로 증가했지만 가구 및 가사용품 108.5, 의류 107.4, 교통 및 통신 107.0,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106.4, 호텔 및 레스토랑 106.9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독일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지만 가구 및 가사용품과 의류 3.6%, 교통 및 통신 2.8%,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3.1% 등으로 높았음 **HRI**

< 독일 가계의 유형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



자료 : ECB(유럽중앙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독일 가계의 '10년대비 '14년 목적별 실질 소비지출 지수 변화 >



자료 : 독일 국민계정.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연구위원 (02-2072-6217, chjss@hri.co.kr)